

민주 “韓, 대선출마 욕심”... 헌법재판관 지명 망비난

한덕수

박찬대 “대통령 꿈 있다면 깨라”
추미에 “개인 야욕 실을 때 아냐”
‘재탄핵’엔 신중론 속 강경론도
우 의장, 권한쟁의심판 청구 방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묘인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을 두고 조기 대선에 출마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며 망비난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대행을 향해 “항간의 소문대로 대통령 꿈을 꾸고 있다면 헛된 꿈이니 열린 꿈 깨시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우리 국민이 또다시 망상에 빠진 헌법 파괴자를 대통령으로 뽑아줄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거대한 착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한 총리가 대통령 묘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권한 없는 자가 자행한 명백한 위헌”이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의 지령에 따라 헌재를 장악하려는

제2의 친위쿠데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완규법제처장은 내란범죄의자인데 헌법 수호기관인 헌재 재판관에 지명하는 것이 말이 되나”라며 “내란수

괴 대행 한 총리의 망동을 좌시하지 않겠다. 오늘 당장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해야 하며, 민주당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내란수괴 대행의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총리는 헌법수호, 내란종식, 민생회복과 국가 정상화를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노골적으로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를 거부한다면) 한 총리는 120년 전 을사오적처럼 역사의 죄인으로 오명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직무대행은 조기 대선과 관련해 “이번 선거의 본질은 헌정수호냐 헌정파괴냐, 민주주의 수호냐 독재 회귀냐의 싸움”이라며 “다시는 내란 세력이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진명(진이재명)계 좌장 격인 정성호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나와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힘이 작용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겠느냐”고 답했다.

정 의원은 “아니면 본인이 노욕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 욕심을 드러낸 것인지 잘

모르겠다”며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중진이 대선 출마를 권유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의심도 해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한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본다면서 “공식적인 불출마 의견을 얘기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추미에 의원은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권한대행을 향해 “내란 세력 척결에 협조하는 것이 마땅하지, 본인의 개인 정치야욕을 실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경고하고 싶다”고 말했다.

당내에서 나오는 한 권한대행 재탄핵 주장과 관련해 김 사무총장은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부 있지만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대응을 하고 상황을 지켜본 뒤 신중하게 대처하자는 것이 대부분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추 의원은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한다면서 “새 대통령 탄생이 확정된 상태에서 제대로 절차에

다른 심의를 할 수 있는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논리”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도저히 해서는 안 될 권한 밖의 행동까지 했는데 대선을 관리할 책임에서 배제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결국 탄핵밖에 없다. 다만 현재 국가 안팎의 여러 상황을 볼 때 신중해야 한다는 여론도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한 대행이 대통령 묘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의장실 관계자는 “국회에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요청이 오는 대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대통령 추천 묘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두 사람은 대통령 묘이어서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필수적인 않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헌재,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소추 기각... 직무 복귀

與 ‘탄핵 정족수’ 권한쟁의각하

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박 장관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박 장관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전날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은 심리에 관여하지 않아 결정문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헌재는 “(박 장관이)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이른바 ‘삼청동 안가 회동’ 논란에 대해서도 “비상계엄이 해제된 대통령 안전구역에서 회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박 장관)이 내란 행위에 따른 법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또 지난해 12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반발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헌재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6(각하)대 2(인용)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10일 국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앞 제21대 대통령후보자 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 공고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국힘, 대선 후보 1차 경선 4인·2차 2인 압축

선출 방식 확정...1차 100% 여론 2차 ‘과반 득표자’ 경선 없이 확정

국민의힘은 10일 두 차례 예비경선(컷오프)을 통해 대선후보를 각각 4명과 2명 순으로 압축하되, 4인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2인 경선 없이 후보를 확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러한 대선후보 선출 방식을 결정했다고 이양수 사무총장이 기자들에게 밝혔다.

국민의힘은 오는 14~15일 후보 등록 신청을 받은 다음 서류심사를 통해 16일 1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한다.

1차 경선은 ‘일반국민 여론조사 100%’ 방식, 2차 경선은 ‘선거인단(당원) 투표 50%·일반국민 여론조사 50%’ 방식으로 진행된다.

2차 경선에서 과반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 투표 50%·일반국민 여론조사 50%’ 비율로 1·2위 득표자 간 최종 경선이 진행된다.

1차 경선은 추첨을 통해 후보를 3개 조로 나눈 뒤 이달 18·19·20일 조별로 토론회를 한다. 21~22일 국민 여론조사가 실시되며, 22일 오후 4명의 2차 경선 진출자가 발표된다.

2차 경선에서는 후보 1명이 다른 후보 1명을 지명하는 1대1 주도권 토론이 총 4

번 열린다. 다른 후보로부터 지명받지 못한 후보는 자신의 주도권 토론 1회를 할 수 있다.

26일에는 4명의 후보가 참여하는 토론회가 진행된다. 국민의힘은 27~28일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하고, 29일 2차 경선 결과를 발표한다. 2차 경선에서 과반을 득표한 후보는 바로 최종 후보로 결정된다.

2차 경선에서 과반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열리는 최종 경선은 30일 양자 토론회, 5월 1~2일 당원투표와 국민 여론조사가 이뤄진다.

최종 후보자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는 5월 3일 열린다.

서울=김선욱 기자

尹, 오늘 오후 5시에 한남동 관저 떠난다

서초동 이주후 임시 거처 고령

헌법재판소로부터 전원 일치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주일 만에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난다.

1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11일 오후 5시 관저를 떠나 서초구 서초동 사저로 이주한다.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참모들이 퇴거 시간에 맞춰 관저를 방문할 예정으로 윤 전 대통령이 별도의 메시지를 내거나 차량에서 내려 인사할 나눌지는 미지수다.

앞서 대통령경호처는 약 40명 규모의 사저 경호팀을 편성을 마쳤다. 윤 전 대

통령은 파면됐지만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다.

사저는 지난 2022년 5월 윤 전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도 약 6개월간 머문 곳인 만큼 경호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전망이다. 다만 단독주택이 아닌 주상복합인 탓에 이웃 주민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

또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키우는 반려동물이 많아 일단 사저로 옮긴 후 수도권에 새 거처를 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관저에서 키우던 반려견과 반려묘 등 11마리를 모두 데리고 퇴거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경호처내 ‘尹 체포 저지’ 김성훈 사퇴요구 연판장

대통령경호처 내 김성훈 차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연판장이 돌고 있는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경호처에서는 일부 직원들을 중심으로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 차장 등의 사퇴를 요구하는 연판장이 돌고 있다.

연판장을 돌리고 있는 직원들은 김 차장뿐만 아니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사퇴

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판장에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윤 전 대통령의 신임을 등에 업고 경호처를 사조직화했다는 주장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김 차장은 회의에서 사퇴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차기 대통령 적합도’ 이재명 32%·김문수 12%

여론조사업체 전국지표조사 정권 교체 48%·정권 재창출 37%

차기 대선에서 정권 교체가 이뤄져야 한다는 응답이 48%, 정권 재창출이 이뤄져야 한다는 응답이 37%로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7일부터 전

날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천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대선 구도 인식과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같이 집계됐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32%,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12%를 기록했다. 홍준표 대구 시장은 7%,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각각 5%를 기록했다.

정당 지지도의 경우 민주당이 34%, 국민의힘이 33%로 오차범위 내였다.

민주당 지지도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떨어졌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그대로였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24.9%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연합뉴스